설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한다

시, 성묘·의료·교통 등 7개 반 341명 구성
자가격리자 모니터링…방역 관리체계 유지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대응 및 비상상황 관리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종합상황실은 종합상황, 성묘·의료, 교통, 환경·청소, 시민·안전, 소방, 급수 등 7개 반 341명으로 구성되며 매일 70여 명이 상시 근무한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등 방역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시청 임시선별검사소 및 5개 구청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콜센터(062-613-3326~7)를 정상 운영해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과 진단검사 서비스를 정상 제공한다.

또 누수 없는 자가격리자 특별 관리대책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1일 4회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6개 반 126명의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비상상황 대응 및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자가격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에 실시간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한다.

이밖에도 응급의료기관 20곳과 응급실 운영 신고기관 4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로 휴진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6곳 및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을 지정해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도 불편이 없도록 한다.

의료정보는 120콜센터(062-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를 이용하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자치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활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주변에 문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감염확산 위험도가 높은 ▲종교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명절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 교통시설과 대중교통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은 연휴기간에도 철저한 방역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영락공원과 망월묘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고, 대신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성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의 방과 e하늘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휴기간 교통정보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ARS 1333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응급의료시설 현황은 응급의료포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불편사항은 광주시 120콜센터와 당직실(062-613-5500~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대설·한파 등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귀성객 등 다수밀집지역에는 구급차량을 전진 배치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연휴기간 중 명절 당일만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산불방지상황실, 연료수급상황실, 급수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 해결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설 명절을 안전히 보내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에서 보내기와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연휴기간 방역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종합상황실 관리체계를 유지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2월 2일까지 3주간 '설 특별방역 및 시민생활안정대책'을 수립해 2대 분야 11개 항목 5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아파트 붕괴사고 수습 지원금 전달 이용섭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마련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부터 사고수습 지원금을 전달받고 있다. /광주시 제공

도, 올해부터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1월분 35만8천명 1,462억

전남도가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 35만8,000명에게 지난해보다 오른 1월분 1,462억원을 일제히 지급,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을 위로했다. 설을 맞아 제수용품 구입 및 손자손녀 세뱃돈 등을 위해 긴요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7,500원 인상한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12만원 오른 49만2,000원이다.

선정기준액도 지난해보다 6.5% 확대해 1인가구는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에서 288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5% 증액한 총 1조2,285억원을 35만8,000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한다.

2021년 12월 기준 전남지역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80.4%(35만8,000명)로 전국 평균 67.2%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전남도가 꾸준히 수혜자를 발굴하고 지원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2021년 기초연금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해 제외·탈락한 경우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력관리제를 통해 자격 기준이 맞으면 그 시기부터 연동해 지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소득이 단절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56년생)가 기초연금 지급 나이로 새로 편입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정기호 강진의료원장 연임…"공공의료서비스 최선"

전남도는 중부권 지역거점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강진의료원 제15대 원장으로 현 정기호(67·사진) 원장이 연임됐다고 25일 밝혔다.

강진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원장 후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후보를 공개 모집했다. 응모에 참여한 총 2명 가운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도지사에게 추천했고, 정기호 후보를 최종 선임했다.

정기호 원장은 2019년 1월부터 3년간 강진의료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여 년간의 의료기관 경영 및 공공기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환자 중심 진료체계 정비, 노사화합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경영 추진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 속 감염병 전담 병원 수행 등 병원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흑자경영으로 전환, 재정적 안정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최하 D등급에서 B등급의 운영 성과를 이뤄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정 원장은 "지역 중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025년 1월 27일까지 3년간 강진의료원 운영 책임을 맡는다. /길용현 기자

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급

숙박비 지원액 3배로 확대
지역 여행업체 지원도 추진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관광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2022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체류형 관광상품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시는 기존 당일 관광 위주로 지원됐던 국내외 유치지원 시스템을 개선해 숙박비 지원액을 1박의 경우 1인당 3만 원(4인 이상 14인 이하 차량) 또는 60만 원(15인 이상 차량)으로 당일 여행 대비 지원액을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체들에 대한 지원계획도 지속 추진한다.

숙박비 지원액 기준으로 관내 여행업체의 경우 1인당 5만 원(4인 이상 14인 이하 차량)또는 80만 원(15인 이상 차량)으로 관외 여행업체 대비 각각 2만 원,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 유치보상금 정책 신청 업체 중 지역 업체는 28%를 차지했으며, 지원 금액은 40%에 육박하는 등 지역여행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에 따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지역업체 우대지원 정책을 지속한다.

외국인 및 무안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본 후 해당 지원금 일부를 내국인 관광객 유치보상금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보상금은 이달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다.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여행업은 관광숙박업, 음식업 등과 연계된 관광산업의 중요 연결고리 산업으로 지원이 절실하다"며 "외래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이 광주여행시장 회복에 촉매제 역할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인프라바운드 여행사를 적극 지원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1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완화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도 평균 5.6%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지원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0만1,000원, 2인 가구 22만 4,000원, 3인 가구 26만 8,000원, 4인 가구 3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6% 인상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 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광주시는 지난해 6만9,388가구에 708억8,792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다. /오선우 기자